

최순실 “대통령 부탁으로 도우려 했다”

2차 공판 “검찰 진술조서 조작됐다·자백 강요했다”…검찰 측, “사건 본질 흐리려는 터무니없는 주장”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재단 설립 모금은 청와대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운)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최씨의 이같은 진술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의 검찰 진술조서는 조작돼 작성된 부분이 있다”며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재단 설립 자금을 전경련 소속 기업들로부터 모을 생각이었냐고 묻는 질문에 최씨가 ‘청와대 쪽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돼 있다”며 “마치 최

씨가 출연금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고 구체적 실행은 청와대가 알아서 하는 걸로 이해될 수 있다. 조서 형식을 빌려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는 수사 이래 지금까지 재단 설립, 특히 모금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며 “모금에 관여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재단 설립에 굳이 관여했다면 극히 일부만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문화·체육 육성 목적의 재단이 만들어지는데 잘 되어가는지 앞에서 지켜보라고 했고 운영체계 등을 도우려 했다”며 “재단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경련에서 자금이 모금되는지 알지 못했다. 그런데 조서에는 최씨가 전경련 자금으로 만드는 것을 알고 있었고 대통령이 최씨가 나서서 것을 싫어해 운영체계를 살펴보라고 했다고 기재돼 있어 진술이 왜곡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최씨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하거나 진술을 압박한 사실이 없다”며 “사건의 본질을 흐도하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K스포츠재단도 미르재단과 같이 전경련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아 (설립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기부금을 모을 생각이었냐고 물었다”며 “최씨는 ‘청와대쪽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K스포츠재단은 최씨와 면담을 거쳐 안 전 수석을 통해 전경련에 전달돼 재단 임원에 임용되지 않냐고 묻자 ‘여러곳에서 추천이 올텐데 청와대에서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며 “2가지 질문에 동일하게 자신은 잘 모르지만 청와대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또 “앞서 미르재단과 관련해 물었을 때 최씨는 ‘청와대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다가 이후 열람하면서 직접 자필로 삭제하고 ‘모르겠다’고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일체의 삭제를 하지 않았고 최씨 스스로 여러차례 수정했다”며 “검찰 진술조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문제를 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시스

‘12세 이하 월 30만원 아동수당’

김광수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광수 의원은 11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월 3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아동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줌으로써 저출산을 극복하지는 취지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2001년 1.3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초저출산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만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3년 후인 2020년부터는 해마다 30만명 이상씩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올해를 시작으로 이번 3년이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고 양육자에게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0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들은 아동양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약 80조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80조의 저출산 예산을 피부로 느낀 국민들이 과연 뜻이나 될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이 국가 지원을 투명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양육자에게 지원하도록하고 이를 제도화시켜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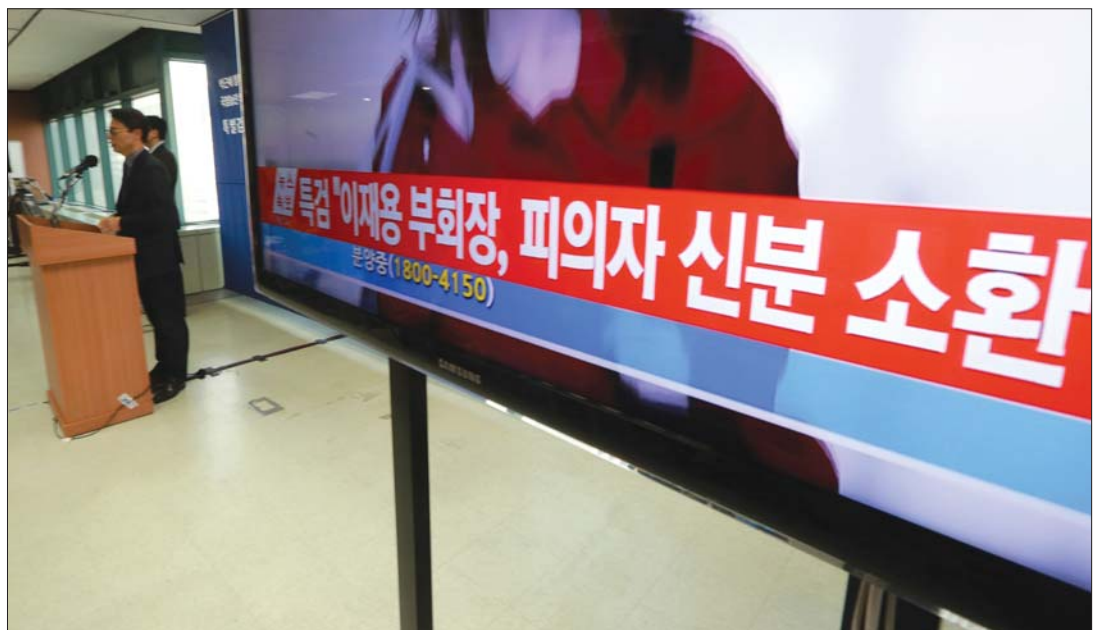
정운천, ‘태양광 농가발전소’ 제안

국회 정운천 의원이 11일 ‘태양광 농가발전소’를 통해 농업을 살리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당 차원의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제안한 ‘태양광 농가발전소’는 정 10만 농가 100kW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농가에는 월평균 116만원 상당의 연금형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10만 농가 태양광 발전소 신재생에너지 2%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친환경 태양광을 통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은퇴한 분들을 위한 노후대책까지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은 앞서 ‘태양광 농가발전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책 제안을 해왔으며 정부도 검토를 거쳐 2020년까지 농촌 태양광 발전소 1만호 보급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인재용 기자



“이재용 부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특별이수부(1800-4150)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9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남원·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 탈당…국민의당 합류

남원·임실·순창 기초의원 및 지역사회인사 10여 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탈당 및 국민의당 입당을 선언했다.

11일 남원시의회 강성원,김승곤,김성기,왕정안 의원과 순창군의회 조순주 의원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을 통해 정권창출과 지역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운영돼왔던 지방의회 내의 기득권과 지역 패권주의는 지역정치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아왔다”며 “어린 줄에 서서 충성을 다하지 않거나 다른 입장을 얘기하면 소외시키기 일췌했던 상황에서 지방의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대선에서는 호남이 중심이 되는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지난 수십년간 호남표는 거저 얻은 것이라며 철저하게 호남을 소외시켜 온 잘못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직 시·군민만을 생각하며, 올바른 의정활동과 사회봉사로 국민의당을 통해 정권창출과 지역발전을 이뤄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국민의당 마타도어식 발언에 더민주 도당 ‘발끈’

“더불어민주당 흠집내기보다는 민생 챙기는 든직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국민의당의 잇따른 민주당에 대한 마타도어식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1일 “지지를 담보상태인 국민의당이 견제하게 설화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옳은데도 불성 사납게 민주당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북도당은 “국민의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낡은 체제와 결별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힌 적이 있다”며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고훈을 겸허한 자세로 받고 실천하는 것만이 국민과 도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으로는 미래를 위한다면서 뒤로

는 민주당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높다는 것을 수단으로 활용해 연일 비난을 쏟아 부는 모습을 보면서 ‘나쁜 구태정치 고질병’이 도진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의당을 꼬집었다.

전북도당은 이날 오전 탈당과 함께 국민의당에 입당을 선언한 남원과 순창 지역 의원들에게 “민주당 소속이었던 기초의원들의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모습이 아쉬움이 크지만 공당의 후보로서 당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이어 “탈당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정당정치와 책임정치의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을 깨닫기 바라며, 자기 성찰하는 계기를 갖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도당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민생보다는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상생보다는 흠집내기나 지방의원 회유에 집착하는 구태정치를 청산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과 도민들의 촛불심판에 맞는 정치개혁과 민생을 살리는데 적극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외교 안보 위기 상황, AI로 축산 농가의 한숨이 깊어지는 현실, 경제가 좋지 않아 서민들이 민생고를 겪고 있는 형국에서 국민의당이 국민과 도민들을 안심시키고 민생을 챙기는 든직한 야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이 내세운 재벌개혁, 검찰개혁, 사회개혁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며 고질적인 적폐 청산에 동참 할 것도 호소했다. /인재용 기자

민주, 후보별 대리인 면담 ‘경선룰 논의’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각 대선캠프별 대리인들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룰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회의를 소집, 각 캠프 대리인들을 불러모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오종식 대리인인, 안희정 충남도지사 측에서는 이후삼 대리인인,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측에서는 함호건 대리인이 참석해 각 후보별 입장을 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이밖에 김부겸 의원 측 김원규 대리인, 최성 고양시장 측에서는 박덕량 대리인이 참석했다. /뉴스시스

안행위, 선거연령 18세 하향 두고 ‘진통’

민주당·국민의당 ‘상정해야’… 새누리당·바른정당 ‘4당 합의 필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1일 현행 만 19세 이상인 투표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안행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선거연령 하향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상정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 룰’에 관한 사항은 여야 4당의 합의가 필요하며 법안 상정을 반대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18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한 당우성의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선거 연령이 나 시간 등은 여야 4당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소위에서 통과가 됐다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철호 의원은 “18세 선거연령 하향은 조속한 시일내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선거에 대해 여야 간에 입장이 있는 것인데 큰 틀에서 봐줘야 한다. 소위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원철 바른정당 의원은 “개인적으로 18

세까지 투표권을 주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선거에 관한 틀을 이런 방식으로 통과시키면 유효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좀 더 깊은 논의가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하고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속한 정개혁위 구성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은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선거에 관한 틀이 아니다”라며 “틀이라고 하는 순간 이미 유풀리는 생각하는 것”이라고 법안 상정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다른 곳에서, 다 같은 논의하고 하는 것은 다 안하겠다”는 말이다. 여당 의원들이 18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수 없는 이유를 하나라도 제시하면 동의하겠다”라며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여당 의원들은 다 표계산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시스

교문위, 조윤선·정관주 ‘국감 위증’ 고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장관과 정 1차관에 대한 고발건을 민정임치로 의결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10월13일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그는 이후로도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그는 그러나 9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특위 결산 청문회에서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했다. 그는 특히 “(특검) 조사 과정에서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정특위에 공문을 보내 조 장관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정특위가 지난 3일 조 장관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차관 고발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이 “청와대 정부수석 책임 당시에도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서도 함께 고발돼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조 장관은 지난해 12월28일 교문위 회의에서) ‘청와대 정부수석 당시부터 전혀 본 적도 없고, 관여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청와대 정부수석 시절부터 문체부 장관이 된 지금까지 모든 과정에서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상당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고발) 경위에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유성엽 위원장은 여여당 간사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문체부 종합보고를 받고 부처 차원의 개선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교문위 전체회의의 소집을 논의하기로 했다. /뉴스시스

안희정, ‘집권시 외치 주력, 내치는 총리에게’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1일 “대통령이 안보와 외교 등 외치에 주력하고, 국무총리가 내치를 힘쓰면 국정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자신의 안보외교 공약을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를 열고 “합법에 따라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지사측은 외교안보가 아닌 안보외교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안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국무회의의 국정 심의 기능도 존중할 것이다. 내각 중심의 민주적 국정운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구를 신설할 것”이라며 “내각과 여야 지도자가 참여하는 ‘안보·외교 지도자회의’가 그것이다. 사드배치, 위안부 합의 등 국론을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주된 논의 주제”라고 공약했다.

안 지사는 전시작전권 문제에 대해서는 “힘찬 국방의 첫 과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며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은 줄이고 자주국방 능력은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앞으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대화체계 모색 ▲대화재개 ▲비핵화 프로세스 3단계 접근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변화 징후를 보이고, 국제사회의 제제가 완화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며 “또 강원 ‘평화’ 선언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한국 쪽에 설치하는 ‘평화 경제특별구역’이라는 경험 공간도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뉴스시스